



## 정통부, 공개SW확산 팔걸었다

공개소프트웨어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공개SW의 보급과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개SW를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2006년 공개SW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2월 21일 밝혔다.

정통부는 올해 공개SW 시범도시와 시범대학을 선정하고, 전체시스템을 공개SW 기반으로 구축하는 기관에 대해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데스크탑(PC) 분야의 공개SW 보급과 확산을 위해 이를 도입코자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의 대상기관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공개SW 적용 시범사업 규모는 총 41억원이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통해 3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 정통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부가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스팸방지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스팸관련 법령과 스팸방지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통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 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정통부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과태료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공해야 하는 등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했다.

또 '불법스팸을 발송하게 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발송하게 한 자'의 구체적 내용을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지원·선동·조장·유도·공모하도록 한 자'로 구체화하고,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밖에 '광고성 정보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토록 법률이 개정돼 이에 해당하는 경우를 '광고발송자의 발신번호를 조작 또는 위장하거나 이메일헤더를 조작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런 기술적 조치를 한 자는 법에 의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게 된다.

## 정통부, '디지털콘텐츠대상' 1분기 응모작 모집

정보통신부가 '2006년 1/4분기 디지털콘텐츠대상' 응모작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개발완료 직전 또는 개발이 완료된 디지털콘텐츠로 △디지털영상 △온라인게임 △교육용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웹정보 콘텐츠 △차세대콘텐츠 등 총 6개 분야. 각 분야별로 1개 작품을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작품의 우수성, 해외 경쟁력, 적용 기술의 우수성,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다.

모집기간은 2월 21일(화)부터 3월 20일(월) 까지이며, 참가신청서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http://www.software.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접수는 이메일이나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수상작 선정결과는 4월 중 개별통보 및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http://www.software.or.kr))에 발표될 예정이다.

## 정통부, 올해 부내 정보화에 1809억원 투입

정보통신부는 지난 2월 17일, 정보화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e-혁신을 통한 전자정부 일등부처 구현을 목표로 총 1809억원 규모의 '2006년도 부내업무 정보화 추진계획' 및 부내업무 정보화 로드맵인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6년도 부내업무 정보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통부는 금년도 정보화예산 가운데 지식관리(IT/OK)시스템 고도화 등 일반행정분야에 40억원, 인터넷우체국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우체국예금이원(利源)분석시스템 구축 등 우정사업 정보화분야에 39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규 정보화사업 예산은 모두 433억원 규모이다.

'중장기 정보화 종합계획'의 주요 투자내용으로는 u-MIC포털 구축 등 일반행정분야 281억원, 차세대우편물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 금융체계 구축 등 우정사업분야에 1514억원을 신규투입키로 하고, 이를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지난해 공무원 정보화능력경진대회 4년연속 1위, 정보화수준평가 최상위 S등급 획득 등 각종 정보화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됐다.

## 정통부, 개인정보 보호 활동 강화

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보호활동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지난해 총 2만7051개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해 수사의뢰와 행정처분, 개선권고 등 총 3982건의 후속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태점검 결과를 분석하면 주민번호 수집률이 73%로 수집비율이 높았지만, 지난 2004년 93%에 비해 20%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목적, 보유기간 등 개인정보 수집시에 고지해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는 19.3%로 2004년 34%에 비해 다소 개선됐다.

이밖에 서면점검 실시 과정에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업체 1847개 가운데 51%인 950개 사업자가 주민번호 수집이 불필요하다고 답변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는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어 주민번호의 관행적 수집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올해 사업자 웹사이트 모니터링, 서면 및 현장 점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요 통신 사업자, 오프라인 사업자(학원·항공사·여행사·호텔, 콘도·할인점·백화점 등) 및 홈페이지 보유사업자 등 2만8000개 사업자에 대한 정례적인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정통부, u-IT839 5년간 576조 생산

정보통신부는 2004년 2월에 수립한 참여정부의 정보통신 정책인 IT839전략을 수정 보완한 u-IT839전략과 본격적으로 유비쿼터스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지난 2월 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u-IT839전략에는 기존 8대 서비스 중 인터넷전화는 상용화됨에 따라 제외하고 DMB와 DTV는 통합하는 대신에 통방융합 및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반영해 '광역 융합서비스'와 'IT서비스'가 추가됐다.

3대 인프라에서는 인터넷 주소체계인 IPv6를 BcN에 통합하는 대신에 '소프트 인프라웨어'가 추가됐으며 9대 신성장 동력에는 이동통신과 텔레매틱스 기기가 통합되고 RFID/USN기기가 추가됐다.

정통부는 u-IT839전략에 '소프트웨어 인프라'와 'IT서비스'가 새로 추가된 것에 대해 IT융·복합화 기술과 제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IT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8대 서비스와 9대 신성장 동력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정부차원에서 직접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